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휴일에도 특별단속

한강유역환경청(청장 : 손희만) 환경감시단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토요일(지난 3월 4일)에 한강수계에 위치한 악성폐수 배출업소 및 문제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염색폐수를 무단방류한 상우섬유 등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위반내역을 보면,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이 7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2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9건,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3건이었다.

서울시 성수동 소재 상우섬유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BOD배출허용기준(120mg/L)을 2.5배 초과(BOD 296mg/L)한 악성 염색폐수 약 38톤을 무단방류하다 적발되었으며, 포천시 가산면 소재 대원섬유와 광주시 초월읍 소재 미래산업 등 3개 업체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남양주시 진건면 소재 축산물 가공업소인 (주)미가는 COD배출허용기준(50mg/L)을 2배 초과(103.5mg/L)한 육가공폐수를,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음식점 늘봄가든은 BOD방류수수질기준(20mg/L)을 7배 초과(146.5mg/L)한 오수를 각각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이밖에 봉산통신공업, 현대가구, 대용약기 등 7개 업체는 도장시설인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되었으며, 대화바텔은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예스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 적발되었다.

참고로 한강환경감시단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4,571개소를 점검하여 818개를 적발(적발율 : 18%)하였으며, '05년 7월부터 실시된 토요일무제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토요일에 특별단속한 결과, 164개 업소를 점검하여 76개소를 적발(적발율 : 46%)

한 바 있다.

이처럼 평일보다 토요일에 배출업소들의 환경관리가 여전히 취약함에 따라 한강환경감시단에서는 토요일 등 휴일에 불시단속을 확대·강화하고,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자체 수사력을 총 동원하여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원

최근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활동 및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연구 기반의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온실가스 배출 통계 분야는 서울대학교, 온실가스 감축정책 분야는 계명대학교, 모니터링·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분야는 고려대학교를 특성화대학원으로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이들 3개 대학원은 정부로부터 올해 1억원씩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필요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정된 대학원에 대해서는 매년 연구수행결과 및 전문가 양성 진척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하여 지원의 계속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은 기후변화 과정 개설, 관련 논문작성 및 연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특히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성된 인력이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 인력 수요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특성화대학원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선정에는 총 13개 대학원이 응모하여 최종적으로 3개 대학원이 선정되었는데,

특성화대학원은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능력, 연구성과의 활용 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금번 특성화대학원 지원에 대한 학계의 높은 관심과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지원금액 및 대상분야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가스를 이용 CDM사업 본격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최근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대표적 환경친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규모 매립가스의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메탄가스) 감축분에 대해 CDM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매립지내에서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약 800Nm<sup>3</sup>/분)를 대부분 포집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수도권매립지 CDM사업은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구온난화 물질중 하나인 메탄가스(매립가스 중 50% 이상 함유)를 감축하고, 그 감축분에 대하여 국제적인 인증과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의 CDM집행이사회(EB)에 등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06년 6월까지 사업요건 충족 검증과 방법론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CDM운영기구(DOE)의 인증을 마치고, 2006년 10월까지 정부(DNA) 승인과 UN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도권매립지 매립 가스는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규모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연간 최대 70만 CO<sub>2</sub>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약 35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3월 현재 UN에 공식 등록된 우리나라의 CDM사

업은 총 108건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이중 매립가스 부문은 16건이다.

이미 울산화학의 수소불화탄소(HFC 23), 온산 로디아 코리아의 아산화질소(N<sub>2</sub>O) 처리 등 2건이 UN의 CDM EB에 등록되어 있고, 최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CDM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국내 매립지에서의 CDM사업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2차 의무감축 공약기간(2013년~2017년)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친환경상품진흥원·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상품진흥원(원장 이상영)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광결호)가, 지난 3월 7일 수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물 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체결을 통해 친환경 절수제품의 '공공부문 친환경상품구매'를 확산시켜 친환경상품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공동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친환경 절수제품을 포함한 친환경상품의 보급촉진, 더 나아가 우

리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시행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친환경상품의 구매확대를 통해 국가의 친환경 경영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효과적인 물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상하수도 분야 전과정평가(LCA), 절수 제품 보급촉진 활동 등을 상호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보급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친환경상품진흥원과 녹색구매제도 도입 등 선도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해 온 수자원공사의 이번 협약 체결은, 양 기관 간 역량 및 기술교류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쾌적한 지구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 산업자원부,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 7월부터 판매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만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가 하반기 중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상의회관에서 SK, GS칼텍스 등 5개 정유사와 7월부터 2년간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공급업체는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를 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전까지 바이오디젤은 일부 주유소에서 주로 버스나 화물차에 시범적으로 쓰여 왔다.

이번에 판매되는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는 바이오디젤 원액 5%를 경유에 혼합한 연료유인 BD5이며 신재생에너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존 경유보다 0.73원 정도 싸다.

산자부는 처음 2년 동안 연간 9만kl 이상의 바이오디젤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년 후부터 바이오디젤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이오디젤은 순환성에너지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으며 경유와 특성이 유사해 디젤자동차의 엔진 변경 없이 경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는 '90년대부터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경유에 섞어 일반경류 차량, 대도시 버스, 관공서 차량 등에 사용해왔다.

산자부는 이번 협약체결이 바이오디젤 상용화시대를 본격 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보호라는 두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보급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세균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주)SK·GS칼텍스 등 5개 정유사 사장단과 작물과학원·영광군 등 바이오디젤 원료 공급업체, (주)가야에너지·(주)비엔디에너지 등 바이오디젤 제조업체 등이 참석했다.

###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환경부는 지난 3월 14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기로 하였다.

동 규칙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 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EU 등 선진국

에서도 포장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국내최고 환경교육장으로 각광

그동안 기피시설로 만 인식되어 왔던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 처리기술의 산실 역할과 친환경 테마공원인 '드림파크'로 변해가면서 최근 견학이 50% 이상 급증하는 등 수도권지역 최고의 환경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2004년 2만명에서 지난해 3만여명이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였고, 특히 잔디축구장, 지압 산책로, 분수대 등으로 구성된 체육공원의 운영과 야생식물전시회, 국화축제, 썰매장 운영 등 계절별 다양한 테마행사에 37만명 등 총 4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등학생을 비롯한 학생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 등 일반인이 38.9%를 차지했으며, 계절별로는 10월(49.3%)과 5월(19.2%)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는 다른 곳과 달리 코스별 체험교육이 가능하고 폐기물의 위생매립에서 자원화 과정은 물론, 양묘 온실, 야생초화원 등 환경테마공원으로의 변화 모습까지도 관찰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체험학습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및 동남아지역 환경담당 고위 공무원들도 수도권매립지를 견학하기 위해 연간 500명이 방문하고 있어 국제적 교류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수도권매립지 견학프로그램은 비디오 시청과 매립현장, 침출수처리장, 유리온실 등을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으며, 15인 이상 200인 이내의 단체이면 공사 홈페이지 견학예약시스템(고객서비스-참여마당-견학안내)을 통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오존, 3차원 수치모델로 예측 가능해져 우리나라 지형특성의 반영과, 배출량 자료의 확충 및 보안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모델 예측능력 확보 서울 도심 오존 해결의 관건은 톨루엔과 자일렌으로 밝혀져 국립환경과학원(원장 : 윤성규)이 한국대기환경학회(전국 10개

대학 참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광화학 대기오염 생성과정 규명과 저감대책 수립'('02~'06) 연구의 4차년도('05) 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지역의 고농도 오존발생 주요 원인물질 및 발생기구를 규명하였고, 광화학 3차원 수치 모델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오존 저감 대책을 도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환경부, 『수변토지 500만평 매수기념 행사』 개최

『수변토지 500만평 매수기념 행사』가 지난 3월 22일 경기 양평군 환경생태공원에서 환경부차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한강수계 관련 공무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환경부는 4대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광역상수원 상류 수변구역 등 하천인접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사업을 2000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531만평을 매수하여 양수리 환경생태공원 등 자연생태 복원과 녹지를 조성하였다.

수변구역 토지 매수사업은 공장, 축사, 음식점, 모텔 등 오염유발시설 및 개발토지 등을 매입하여 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같은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전예방적인 사업으로 오염억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식수 등 나무심기 행사를 비롯하여 박문재 시인의 '한강의 숲'이라는 시가 새겨진 기념비를 제막하고, 한강의 유래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과 청소년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친환경적 생활방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환경사랑 청소년 환경상' 수상 작품을 전시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자연생태의 복원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변구역 토지매수를 더욱 확대하고, 매수한 토지중 친환경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토지의 수질개선기능을 강화하여 수생태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수체와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를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